기획예산처	보도설명자료	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배포 2026. 11. 9.(월)

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재정지표에 '착시'가 발생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.

< 보도내용 >

□ 2026.11.6.(금) 한국일보는 「재정지표는 개선됐다는데 나랏빚 107조 늘어... 미래대응기금發 '착시'」 제하의 기사에서,

○ "2027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107조원 늘어난다. 정부가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조1,000억 원으로 제시한 것과 상반되는 지표이다.", "국가채무 비율이 올해 51.6%에서 내년에는 48.3%로 낮아진다는 설명도 비교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."라며,

○ "역대 최대라는 지출구조조정 107조6,000억 원도 세부사업 내역을 보면 다르다. 이 중 63조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가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이다.", "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은 내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미래대응기금으로 옮긴 사업예산을 감안하면 늘어난다."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
< 정부입장 >

【 관리재정수지 적자에 비해 국가채무가 크게 늘어난다는 지적 관련 】

□ '27년 국가채무 증가분은 기존 사회보장제도 등 경직성·의무지출, 각종 연차 소요, 국방·안전 등 국가 필수기능과 같은 기본적인 재정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, '27년 국가채무는 지난해 수립한 '25~'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12조원 이상 축소*되었습니다.

* '27년 국가채무: ('25~'29 계획) 1,532.5조원 → ('27년 예산안) 1,519.8조원

□ 추가세수의 일정 부분을 향후 세수 변동 등 재정안정화를 위한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였기 때문에 ’27년 관리재정수지가 -3.1조원(GDP 대비 -0.1%)입니다.

【 내년 국가채무비율이 상승한다는 지적 관련 】

□ 국가채무비율은 “계획 대 계획”으로 비교하는 것이 원칙으로, ’26년 국가채무비율 51.6%와 ’27년 48.3%는 모두 예산안 제출 시점의 공식 계획 수치로 동일한 기준의 수치를 비교한 것입니다.

○ 국제적으로도 당초 계획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확립된 원칙으로, IMF·WB 등이 사용하는 PEFA(공공재정관리 성과평가체계)는 당초 승인 예산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되어있으며, EU 재정프레임워크도 직전 제출계획 대비 신규 제출계획을 비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□ 동일 연도의 국가채무액은 전년 계획대비 모두 축소되었으며, 정부는 ’30년까지 관리수지를 -3%(GDP 대비) 이내, 국가채무비율을 50%(GDP 대비) 미만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.

< 25~29 국가재정운용계획 - 26~30 국가재정운용계획 국가채무 비교 >

(조원, %)		‘25		‘26		‘27	‘28	‘29	‘30
		본예산	2차추경	본예산	추경				
국가채무 (GDP%)	’25~’29	1,273.3 (48.1)	1,301.9 (49.1)	-	-	1,532.5 (53.8)	1,664.3 (56.2)	1,788.9 (58.0)	-
	’26~’30	-	-	1,413.8 (51.6)	1,412.8 (50.6)	1,519.8 (48.3)	1,600.3 (48.9)	1,659.1 (48.8)	1,734.1 (49.0)

【 지출구조조정 실적 관련 】

□ 교부세·교부금 개편 등 의무지출 구조조정을 제외하더라도, 재량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38.6조원으로 역대 최대입니다.

○ ❶소규모·관행적 지원,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과감히 절감하고, ❷저성과 사업과 여러 부처의 유사·중복 사업도 고강도로 구조조정하여 당초 목표인 15% 감축을 달성하였으며, 전체 사업의 10% 이상인 2,100여 개 사업을 폐지하였습니다.

□ 아울러 그간 제도 개선이 어려웠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주요 의무지출 사업에 대해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.

○ (지방교육재정교부금) 55년간 유지된 내국세 연동 구조를 개편하여 학령인구 변화와 경상성장률을 반영하고, 절감 재원은 인재 양성에 재투자합니다.

○ (구직급여) 무급휴일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,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 범위를 조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.

【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부처 예산 증감률이 달라진다는 지적 관련 】

□ 미래대응기금 사업은 소관 부처가 그대로 수행하며, 부처 예산이 감소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단순 회계상 구분에 따른 것입니다.

○ 기획예산처는 기금관리주체로서 기금의 전반적인 운용을 담당하고, 소관 부처는 사업 기획부터 예산 편성·집행까지 사업 전 주기에 걸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.

담당 부서	미래전략기획실 미래대응기금 추진단	책임자 담당자	단 장 박성훈 (044-214-1690) 서기관 박성준 (bbakko0@korea.kr)
	미래전략기획실 지속가능재정과	책임자 담당자	과 장 오현경 (044-214-1830) 사무관 전찬익 (jky820@korea.kr)
	예산실 예산정책과	책임자 담당자	과 장 김정애 (044-214-2330) 서기관 하치승 (hcs017@korea.kr)